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목 차>

1. 민간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2.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지호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윤창호		연락처	02-2100-2983
	과장	홍성기		이 메 일	fsc0143@mail.go.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민간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2.규제조문	제5조의6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4.5~4.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규제 인센티브 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요건 중 금리요건 (평균·최고금리)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대출금리 인하 유도 ※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여전사의 대출업무 규제(대출자산은 총 자산의 30% 한도)적용시 중금리대출은 80%만 대출액에 반영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중금리대출과 같은 요건인 중금리대출 인정요건 중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을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구분하여 업종별 비용요인을 고려해 차등화 및 금리요건 인하 ○ 신용카드업자 취급 대출 : 평균금리 11.0%, 최고금리 14.5% ○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 : 평균 금리 14.0%, 최고금리 17.5%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피규제집단)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금융 소비자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한 중금리대출 요건개선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6(개인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이란 분기단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상품의 해당분기 대출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제5조의6(개인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 ----- ----- ----- ----- ----- ----- --. 다만, 종료되지 않은 분기 중에 취급한 대출의 경우 해당 분기 종료까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가중평균금리가 100분의 16.5 이하인 경우</u>	2. <u>가중평균금리가 다음 각 목 이하인 경우</u> 가. <u>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1.0</u> 나. <u>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4.0</u>
3. <u>최고금리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u>	3. <u>최고금리가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u> 가. <u>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4.5</u> 나. <u>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 : 100분의 17.5</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 배경

□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 중

* ①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 ②대출금리가 20% 미만, ③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④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할수록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규제 달성이 용이해지는 구조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여전 (’18.10.~)	■(규제)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예시) 대출자산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저축은행 (’16.9.~)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대출은 150%로 인정
신협 (’18.11.~)	■(규제)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이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1/3 초과 불가 ■(인센티브 예시)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중금리대출 인정요건 중 금리요건(평균·최고금리)은 정부가 장려하는 금리수준으로, 금융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조정해 왔음*

* 가중평균금리요건: (’16.9월) 18% → (’18.1월) 16.5%
최고금리요건: (’18.7월) 20% 요건 신설

○ 법정 최고금리 인하(’18.2월) 등으로 ’18년중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 하락하고 있어, 금리요건 재정비 필요

* 대고객 정기에금(12개월) 약정금리 평균: (’18.1월) 2.44% → (’18.12월) 2.62% (0.18%p ↑)

** 신규취급금리: (’17.12월 중) 22.5% → (’18.12월 중) 19.3% (3.2%p ↓)

- 금리요건이 달성하기 용이한 수준인 경우,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중금리대출로 분류되어 총자산 대비 대출 비율 규제 준수가 용이해짐
- 이 경우,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대출공급에 애로 발생 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여신전문금융회사 중금리 대출 기준 일괄 적용
	내용	가중평균금리요건: 16.5% 최고금리요건: 20%
규제대안1	대안명	업종별 비용구조에 따른 대출 기준 적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평균금리 11.0% - 최고금리 14.5% ○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평균금리 14.0% - 최고금리 17.5%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실적 증가	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금리 인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규제대안1	여전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여전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감소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금리요건 차등화를 포함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18.10)」 수립 과정에서 업권별 비용구조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선택 근거)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자 조달금리, 부실율(고정이하여신비율), 판매·관리비(자산대비) 등 비용요인을 감안하여 결정

-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상호·카드·캐피탈·저축은행업권 각각의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금리요건을 차등화하고 법령에 반영 추진중

* (가중평균금리) 은행 6.5%, 상호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최고금리) 은행 10%, 상호 12%, 카드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

3. 규제목표

- 여전사의 대출규제(총자산대비 30%한도)적용상 인센티브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인하함으로써,

-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

※ 중금리대출 요건 자체는 규제가 아님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신용카드업자는 5.5%p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자는 2.5%p 인하하는 것으로, 업권의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폭을 설정

- 중금리대출요건 자체는 규제가 아니라 여전사의 대출규제 적용상 인센티브 요인임

- 강화된 중금리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총자산 대비 30% 한도인 대출비중이 다소 높아지나,

-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신탁법 제40조제1항, 신탁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감독규정 제22조의2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되어 발표된 사항(중금리대출 발전방안, '18.10월)임

○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도 중금리대출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므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2. 향후 평가계획

- ☐ 금리요건 인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책 등 검토 예정

3. 종합결론

- ☐ 중금리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업종별 비용구조에 따른 대출 기준 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여신전문금융회사
활동제목	대출업무
비용항목	대출자산운용 제한따른 기회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input type="checkbox"/> 중금리 대출요건인 금리기준의 인하는 직접적으로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을 야기하지 않음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여전사 대출 수요자
활동제목	대출업무
편익항목	금리인하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 기대
근거설명	<input type="checkbox"/> 중금리 대출요건인 금리기준 인하에 따라,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효과 기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			
	2.규제조문	제11조제2항			
	3.위임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4.5~4.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사의 카드론과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같은 개인신용대출임에도 충당금 적립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충당금 기준이 카드론보다 낮으며, 복수론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의무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러한 규제차익으로 카드론외 신용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가계대 출관리가 곤란해지고,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우려 ➔ 충당금 적립기준 개정을 통해 규제차익 해소 필요			
	7.규제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카드론외 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 <input type="checkbox"/> 복수카드론에 대한 추가 충당금 부과 의무를 카드론외 신용대출 에도 적용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업자(8개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카드론과 카드론외 신용대출간 규제차익 해소 통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1. 결산일 현재 <u>채권</u>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연간 적용금리 또는 연환산 적용금리가 100분의 20 이상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 ----- <u>채권(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 ----- ----- ----- ----- ----- -----

현행	개정안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결산일 현재 <u>카드대출자산</u> ,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자산(리볼빙자 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건 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 의 신용카드업자에 <u>장기카드대출 잔액</u> 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장기카 드대출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 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4. ----- <u>카드대출자산, 신용카 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u> , ----- ----- ----- ----- ----- <u>장기카드대출(신용 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을 포함 한다) 잔액</u> ----- ----- -----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 배경

□ 카드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총당금 규율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 카드로는 “회원·에 대한 장기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는 “회원·에 대한 단기 카드 대출”로 정의하고 높은 총당금·율 등 부여(여전업 감독규정)

○ 비·회원·에 대한 대출(“카드로· 외 대출”)에 별도 규제가 없어 총당금 기준(일반채권 기준 적용) 등 규제·차익 발생

* ① 총당금 기준 : (요주의) 카드로· 50% / 카드로· 외 신용대출 10% 등,
②(카드로·)2개이상시 총당금 30%·가산 설정/ (카드로·외·신용·대출)·총·당·금·가·산·없·음· 등

□ 총당금 등 규제·차익, 카드로· 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16년 이후 “카드로· 외 신용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
(‘15·말 938·억원 → ‘18·6·말 6,971·억원(7.4배 증가))

* 복수 카드로·에 대한 추가 총당금(30%) 부과(‘17·3·월 발표) 등 카드로· 관리가 본격 강화된 이후 큰 폭 증가

○ ‘18·6·말 카드로· 외 신용대출은 6,971·억원(전년·동기·비 +36.5%)으로 증가·속·도가 카드로·(+11.3%)의 3배(규모는 카드로·의 2.3%)

○ ‘15·년까지 일부 카드사(KB, 삼성 등)만 “카드로· 외 신용대출”을 취급했으나, 현재는 전·업·계 8개사 중 6개사가 취급

- 이·중 3개 카드사(우리(2,446·억원), 신한(2,250·억원), KB(1,739·억원))가 전·체 카드로· 외 신용대출 규모의 92.3%를 차지

○ 카드로· 외 신용대출(6,971·억원) 중 회·원·에 대한 대출도 2,895·억원(41.5%)에 달해, 카드로· 총·당·금·규·제·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2)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카드로 外 신용대출의 규제차익 등이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 관리 곤란, 카드대출 부실화 등이 우려됨

○ 카드로 外 신용대출은 높은 총당금 규율, 가계대출 관리목표 등 규제·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신용대출이 대부분 고금리대출(14~15%대)인 점에서, 경기부진·시중금리 상승 등 발생할 경우,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

※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계층의 상당수는 경기부진·시중금리 상승 등에 취약한 저신용 한계계층

* 신용카드사 연체율 : ('17.3Q)1.82% → (4Q)1.80% → ('18.1Q)1.96%

➡ 규제차익을 해소하여 카드로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 및 카드대출 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총당금 수준 유지
	내용	카드로 외 신용대출에 낮은 총당금 규제 적용
규제대안1	대안명	카드로 규제 수준과 동일한 총당금 규제 등 적용
	내용	-카드로가 규율 받는 총당금 적립의무수준을 카드로 외 신용대출에도 적용 -카드로와 마찬가지로 카드로 외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고위험대출의 추가총당금 적립비율을 대손 총당금 적립률에 30% 가산하도록 의무화
규제대안2	대안명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외 신용대출 금지
	내용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을 전면 금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당금 규제차익을 노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악영향 초래 가능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대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여 카드론 외 신용대출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가능 • 궁극적으로는 대출별 리스크에 걸맞는 총당금 적립의무를 부여하게 되어, 신용카드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카드론 외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하면서 일부 차주의 자금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인 카드론 외 신용대출을 금지하여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 • 여전사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문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용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 의견수렴에 대해 질의사항을 수렴하여 답변 검토하는 기회를 가짐('18.12.21, '19.3.14) · 입법예고('18.4.3.~4.25.)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규제차익 등이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 관리 곤란, 카드대출 부실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유지 안은 선택대상에서 제외
- ☐ 2안의 경우 규제차익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하나, 카드사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 총액 제한 등 직접적 규제보다는 추가총당금 적립 등 간접적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

➡ 대안 1 선택

3. 규제목표

- ☐ 카드론과 카드론외 신용대출간 규제차익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이와 함께, 한계차주의 상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여 대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대내외 경제·금융상황, 향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여신전문 금융업권 건전성 지표 및 대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설정
- ☐ 대손충당금 제도는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합리적 비용을 추정하고 해당 비용을 사전에 조합 또는 금융회사 내부에 유보하여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피규제대상인 8개사는 모두 중소기업이 아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여신전문금융사의 자산 규모·구성 등 운영 사항을 직접적·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로 계속 존속 필요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은행법(제34조),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은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 등 경영지도기준에 따를 의무를 부여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준용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 규제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의

참여하에 건전성지표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규제차익 제거를 위해 모든 여신전문금융사에 공통 규제 적용 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이 가능하므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여신전문금융사 내부에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의 참여하에 금번 카드론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18.12.21, '19.3.14)

2. 향후 평가계획

- ☐ 규정 시행 후 주요 여신전문금융사의 규제준수 여부 점검

3. 종합결론

- ☐ 카드론의 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인상 및 추가충당금 적립 의무화는 규제차익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없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 및 연체율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신전문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카드론 규제 수준과 동일한 총당금 규제 등 적용>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활동제목	대출업무
비용항목	대손충당금 적립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궁극적으로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대손충당금 제도는 향후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사전에 금융회사 내부에 유보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p> <p>○ 대출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된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게 됨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입 가능)</p>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금융회사(신용카드사)
활동제목	대출업무
편익항목	금융시스템 안정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위기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편익은 매우 큼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사가 부실화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 기반을 마련</p>